

금암동 신축 청사 부지 선정 논의

전주시,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4차 회의 가져… 주민 접근성·부지 여건 등 고려

전주시는 19일 금암2동 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4차회의'를 열고, 통합 금암동 신축청사 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 접근성과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부지 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통합 금암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될 신축청사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3월 10일부터 임시 통합청사로 사용될 현 금암 1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전 준비에 힘쓰고 있으며, 금암2동 주민센터에는 현청사 무소를 설치하는 등 통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현 금암1·2동 통합을 위해 지난해 5월 주민설명회와 7월 주민여론조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으며, 신청사부지 결정 등 통합에 따른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4차



전주시는 19일 금암2동 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4차회의'를 열고, 통합 금암동 신축청사 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최찬욱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최적의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전주시와 통합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금암 1·2동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어가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금암동 신축청사 부지의 선정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성국(효치5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의회,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총력

남관우 의장 시군의회 홍보협력단 총괄단장·최주만 부의장 전주시 홍보위원장 위촉

전주시의회 남관우(전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시군의회 홍보협력단을 이끌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시군의회 홍보협력단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총괄 단장에 위촉됐다.

또 전주시의회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부의장은 전주시 홍보위원장에게 위촉됐다. 시군의회 홍보협력단은 남 단장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196명의 의원이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 또 최 부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 의장들은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남관우 단장과 최주만 위원장은 "온 오프라인은 통한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 등으로 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과 이성국 의원은 전주시 홍보위원장을 위촉하여 결성된 범도민지원위원회 사무총장과 전주시 지역 사무국장을 각각 맡고 있다. /김옥기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상고심의 재

판과 파기 이유는 하급심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기에 이 법정에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과 관계된 라디오 토론회, TV토론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과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모두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나온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과 환송 전 항소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이 시장은 직을 잃을 뻔했지만 대법원은 소위 '이재명 판례'로 불리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뉴스

전주시 완산구, 민생경제 회복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유관 단체들과 간담회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8일 한국외식업 중앙회 전주시 완산구지부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부서별 유관 단체들과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완산구청장과 각 부서장, 담당팀과 유관단체 구성원들이 참석하며, 지역 상인회 및 유관 단체, 협회 등 총 12개 단체와 진행하여 지역 경제 주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구는 지역 주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발굴하고, 유관 부서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경제 안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지역 경제 주체와의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주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논의하여 민생경제 회



전주시 완산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8일 한국 외식업 중앙회 전주시 완산구지부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부서별 유관 단체들과 간담회를 추진한다.

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경제 주체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대

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